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변액연금&연금저축의 오해와 진실
오피스텔 고를 때 '이것만은 꼭'
요즘 대세 ELS 중 최고 상품은

20년 전 가계부의 경고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사가 꼽은 '노른자위'

'나에서 우리로' 공유경제가 세상을 바꾼다
격랑에 휩싸인 하이마트호 어디로 가나
신세대 직원과 거리 좁히기 '이렇게 하면 OK'



한국경제신문

값 3,500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변동환율 도입...부동산 장기 임대 가능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미얀마의 개혁 정책에 대한 기사가 연일 현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4월 1일 실시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구체적인 경제 제재 해제에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가능성만 보여주던 미얀마가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 얼굴을 내미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급격한 개방이

줄 미얀마 경제의 충격파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미얀마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 기회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지만 미얀마 자체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도 투자를 가로막는 데 한몫했다. 1988년 제정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35% 이상 지분 투자를 하면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유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외국인의 이익배당 송금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임대 받아야만 했고 외국인이 납입한 자본금은 시장 환율과 동떨어진 공식 환율에 의해 표기돼야 했다. 공식 환율은 시장 환율과 크게는 130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왔다.

미얀마 정부는 작년부터 진행된 정치·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낡은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중이다. 의회에서는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다.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공개돼

있지 않아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얀마 정부의 발표 등에 비춰 보면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지되는 투자 유형을 명시하게 된다. 외국인이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의 투자 금액을 공식 환율이 아닌 시장 환율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3년을 기본으로 부여하던 법인세 면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도 포함되고 한다.

사실 개정 외국인투자법에 포함될 내용 중 일부 사항들은 다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제도적으로 도입된 부분도 있다. 미얀마의 복잡한 환율 체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항상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미얀마 정부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등 이중적인 환율 대신 시장 원리에 입각한 변동환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식 환율을 적용해야 했던 외국인투자법의 전제가 이미 바뀐 것이다. 정부로부터만 장기 임대가 가능했던 부동산 관련 법제도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 밖에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을 통해 노조 설립이 허용됐고 특별경제구역법을 통해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지만 미얀마의 법령 변경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것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외국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발표되고 있는 미얀마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

한국경제신문



미얀마는 토지 장기 임대와 변동환율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미얀마 국회의사당.